

내달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개인정보 논란은 여전

휴대전화 개통과정에 안면인증 적용 관리 공백·제도적 사각지대 우려 정부 “안면정보 인증 결과만 보관”

정부가 추진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안면인증 제도가 내달 시행된다. 휴대전화 명의 도용과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취지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공백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제도의 시범운영이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대폰 개통시 필요한 경우 사용자 동의를 받아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국가기관·공공기관 보유 정보나 신분증 사진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시스

시작된 시범운영이 한 차례 연장된 끝에 약 6개월 만에 공식 도입되는 것이다.

안면인증은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패스(PASS) 앱에서 촬영한 얼굴을 실시간으로 신분증 사진 등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 약 43개의 대면·비대면 가입 채널에서 활용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우려는 여전하다. 생체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고, 다른 인증 체계와 결합될 경우 개인 식별 위험도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통신 유통 현장에 인증 절차가 추가되면 대리점 단말, 인증 시스템, 결과 보관 서버 등 관리해야 할 지점이 늘어 보안상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얼굴정보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며 정책 폐기를 요구해왔다. 이지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악용 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안면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계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동의는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정부는 안면정보 자체는 저장되지 않고 인증 결과만 보관된다는 입장이다. 대체 인증 수단으로 주민등록초본 제출 또는 행정안전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활용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장에서 관리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브리핑에서 안면인증 제도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우선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외국인 신분증으로 넓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발급·관리 주체가 달라 안면인증 시스템 연동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확인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법령 정비까지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법제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즉, 안면인증 제도는 오는 7월 현장에 바로 적용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포폰 적발 건수가 늘고 있어 본인확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실제 현장에서 고객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카카오 노조, 오늘 ‘로그아웃데이’ 강행… 갈등 장기화

성과급 보상 협상서 접점 못찾아 5개 법인, 최대 3000명 참여 전망 카카오, 서비스 안정성 최우선 대응

카카오노조가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사측과의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 예정된 ‘로그아웃데이’를 강행한다. 사측은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노조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29일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펀드, 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로그아웃데이’를 진행한다.

로그아웃데이는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 또는 오프를 사용해 업무를 중단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



민주노총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조합원들과 연대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광장에서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의 집단행동이다. 지난 10일 진행한 반일 파업보다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형태다.

카카오 본사 노조 조합원은 약 2500명 규모다. 업계에서는 계열사를 포함한 참여 대상이 최대 3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참여 인원은 당일 집

계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번 집단행동에서도 별도의 오프라인 집회나 기자회견은 열지 않을 계획이다. 향후 추가 대응 여부는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

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약 13~14% 수준인 1000만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해당 요구가 경영 부담이 큰 수준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 노사는 지난 5월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이후 두 달 가까이 협상을 이어왔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로그아웃데이가 전일 업무 중단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서비스 운영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반일 파업에는 본사 기준 약 1000명, 5개 법인 기준 약 1500명이 참여했지만 주요 서비스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동화된 운영 체계와 비상 대응 조직이 가동되면서 이용자 불편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에는 참여 규모가 확대될 가

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하루 동안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예기치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응 속도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는 서비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와 플랫폼 서비스는 상당 부분 자동화돼 있어 단기간 집단행동만으로 대규모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인력이 줄어드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과 보상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조직 분위기와 인재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노사 모두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AI 시대 속 직장인 생존전략… 美 ‘이동’ 韓 ‘버티기’

오늘 AI

이직·해고·창업 관련 검색 데이터 美 48% 늘어… 고용불안 대비 적극 韓 37% 줄어… 위험보다 유지 성향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구조 재편으로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직장인들의 대응 방식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해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 탐색이 크게 늘어난 반면, 한국에서는 이직과 창업 관련 검색이 감소하며 현 직장에 머무르려는 분위기가 짙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직장인 커뮤니티 플랫폼 블라인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과 미국 이용자의 이직·해고·창업 관련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관련 검색량은

55만5642건에서 82만2608건으로 48%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48만6348건에서 30만5879건으로 37%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4년간 미국 검색 278만8629건과 한국 검색 158만865건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흐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검색량이 증가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감소 폭도 점차 확대됐다.

미국에서는 이직 관련 검색이 31만 6879건에서 44만9261건으로 증가했다. 이력서 작성과 추천 채용, 헤드헌터 등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한 정보 탐색이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해고 관련 검색도 같은 기간 22만5930건에서 36만4930건으로 60% 이상 늘었다.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퇴직 보상’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검색도 함께 증

가해 고용 불안에 대한 대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서는 이직 관련 검색이 36만 8962건에서 19만8319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해고와 구조조정, 희망퇴직,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검색은 2023년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를 나타냈다. 창업 관련 검색 역시 1만1764건에서 7135건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국내 채용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이직을 시도하기보다 현재 직장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확산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블라인드 관계자는 “미국 직장인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고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를 적극 탐색하는 반면 한국은 현 직장에 머무르며 상황을 지켜보려는 관망 심리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LG U+,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LG유플러스는 지엔씨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사는 경기도 파주시에 건설 중인 파주 AIDC에 공급되는 비상용 발전기를 포함해 향후 AIDC 관련 인프라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핵심 설비를 적기에 대응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증설 및 확장을 고려해 설비 표준화 협력도 이어간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AI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비상 발전기 등 전력 설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설비 발주 후 수개월 내 공급된 반면 최근에는 2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AI 인프라는 고도의 안전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 중단과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AIDC에 최적화된 비상용



지난 24일 서울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정승경 LG유플러스 AIDC 사업담당(왼쪽)과 안병철 지엔씨에너지 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발전기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인프라 수요와 공급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설비 수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